

창간 30주년 특집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기와 전망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와 최근의 정세 변화*

박승우**

요 약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 구축에 관한 여러 담론 중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주된 논의를 동아시아 공동체의 경계와 구성,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목표와 원칙,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방법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국제정세상의 세 가지 주요 변화, 즉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재개입, 유럽의 위기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 던지는 함의 및 교훈을 살펴보았다.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임함에 있어서 중국 주도의 패권적 지역질서가 출현할 가능성과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유럽의 통합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여하히 우회하여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 창출을 도모할 것인가 등 많은 질문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지역협력

11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와 최근의 정세 변화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머리말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주의(regionalism)’,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학계 안팎에서 꾸준히 주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초기에 주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동아시아’가 호명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말부터는 동아시아의 발전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그 후 경제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대한 국내의 공적(公的) 관심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우리 학계에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2005년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출범하고, 2011년에는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마저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바, 이러한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내포적 동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만 들어내는 아래로부터의 ‘지역화(regionalization)’ 추세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역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재(再)개입(re-engagement)’은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동아시아 담론은 역내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리와 방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지역에서 대규모·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 현상을 제대로 설명·진단하고 그 방향을 전망하며, 이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정치안보적 문제에 대한 해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하고, 최근 좀 침잠해진 듯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학계 안팎의 공론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최근 필자가 제기한 새로운 유형의 동아시아 담론인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을 소개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동아시아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논의를 전제로 재구성된 새로운 담론 유형이다. 필자는 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관점을 세 가지 측면, 즉 ① 동아시아의 개념·경계와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 및 멤버십, ②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목표·지향점 및 지역공동체 구축의 기본 원칙, ③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방법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할까 한다.

다음으로 최근의 국제환경의 변화가 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 어떠한 과제와 교훈을 던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 구축을 둘러싸고 몇 가지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세 가지 정도가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급부상이다. 중국은 2010년 GDP규모에서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으며, 이를 통해 지역패권을 넘어 세계패권을 넘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지역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는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귀환’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에 대해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오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에 다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셋째는 유럽의 위기이다. 최근 들어 그리스의 외환위기로 시작하여,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 지역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일회성의 경제적 난국이라기보다 유럽연합(EU) 전체의 총체적 위기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가 전술한 세 가지 쟁점, 즉 ① 동아시아 공동체의 경계와 구성, ②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목표와 원칙, ③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방법론 등에 어떤 교훈과 함의를 던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II.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필자는 4년 전에 발표한 두 편의 글에서 199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지역주의) 관련 담론을 ‘경제공동체 담론’, ‘지역패권주의 담론’,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대안체제 담론’, 이상 네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박승우 2008a; 2008b). 그 이후 이 유형론을 인용 또는 차용하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속 논의들이 이어졌다(나종석 외 2009; 박상수 2010; 이종석 2011; 한승조 2011).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지역패권주의 담론’이란 유형은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 실제로 제기된 다양한 동아시아 관련 논의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 필자는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 안보공동체론’이라 부를 수 있는 논의를 새로 포함하고, 이를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약간은 느슨한 이름을 붙여 재구성해 보았다(박승우 2011). 그리고 위의 네 가지 유형에다 새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것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된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볼까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전혀 새로운 담론이 아니라 기존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과 ‘안보공동체론’, 그리고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과 ‘대안체제 담론’으로 분류되었던 여러 다양한 담론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던 문제의식과 관점, 그리고 그 주장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것이다.¹⁾ 이 담론에 속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특히 전술한 세 가지 쟁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관점과 입장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 그리

1) 여기서 ‘동아시아공동체’라고 ‘동아시아’와 ‘공동체’를 붙여 쓴 이유는 이 담론의 명칭을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로 쓰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동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담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발표문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특정의 담론만을 지칭하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용어 선택이다.

〈표 1〉 우리나라 동아시아 담론의 제 유형

담론의 유형		주요 담론가들의 관련 분과학문
경제공동체 담론	· 동북아 경제공동체론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	경제학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	· 지역 안보공동체론	정치학
	· 동북아 안보공동체론 ·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론 · 현실주의적 동아시아론 · 패권이론 · 세력균형론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 문화동질성 담론 ·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 ·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	인문학(문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대안체제 담론		인문학 (문학, 역사학)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 ·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론* ·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 · 대안체제 담론* ·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학제적, 초(超)분과학문적, 통합적

주: *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기존에 제기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동아시아 정체성’, ‘대안체제’ 담론의 일부를 포괄한다.

** 또한 기존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의들도 포함한다.

고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식의 전부(또는 일부)를 자신의 동아시아 논의에 담고 있는 담론가들은 이 새로운 유형화의 틀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가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관련 담론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문학 등 개별 분과학문별로 각각 서로 다른 초점과 정향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으며, 특정 유형의 담론은 대체로 특정 분과학문의 영역 내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예컨대, 동아시아 지역에 하나의 안보공동체 또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제정치학과 비교정치학을 전공하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왔고, 동아시아 지역에 단일의 자유무역지대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과학문의 경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 및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와 상호의존, 그리고 이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 움직임은 하나의 총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경제와 정치·안보, 그리고 사회·문화가 각각 따로 놀지 않으며, 모든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 공동체 구축 작업 또한 경제 부문 따로, 정치안보 부문 따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의제 따로 다루어서 될 그런 성격의 과제가 아니며, 이 모든 영역에서 총합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동아시아 지역 내에 하나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거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문제가 경제학자들만 다룰 사안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그것이 최근까지 계속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체 과정을 복기(復棋)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경제학적 접근의 대상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또 지역 안보공동체 논의와 더불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또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가 정치학자들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사안인가. 이 또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인문학의 학문영역에 구애받을 성격의 사안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논의의 대상인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새로운 유형의 담론을 상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담론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의식과 관점, 또는 기본 전제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보자.

1. 무엇이 동아시아인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경계와 구성

먼저 동아시아의 개념과 그 경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대상,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 및 멤버십에 관한 관점이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가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동아시아가 동북아 또는 한·중·일 3국에 국한된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이들에게 ‘동아시아’는 ‘한·중·일’ 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며, 또한 그 외연과 경계에 대해 이들은 그리 엄격하거나 폐쇄적이지 않다. 이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역의 경계를 전혀 상정하지 않거나, 그 외연을 무한정 방만하게 확장하려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범위 문제가 ‘동북아+동남아’ 또는 ‘아세안+3’으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도 아니다. 동아시아를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는 13개 국가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다른 나라도 포괄하는 보다 광역의 지역을 상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가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는 EAS의 구성 국가 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와도 연관이 있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성격이나 추진전략과도 관련이 된다. 어떤 이들은 아세안+3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의 강대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아세안을 지역질서 구축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박사명 2006; 신윤희 2008; 2010; 황인원 2007 등). 반면에 미국과 러시아·인도·호주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광역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주창하는 이들도 있다(한승조 2011; 한용섭 외 2005 등).²⁾ 또한 경제학자들 중에는 아세안+3에 인도 등 남아시아 정도가

2)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범(汎)아시아주의(Pan-Asianism)’ 대 ‘범태평양주의(Pan-

포함되는 선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박변순 2010 등). 어쨌든 동아시아의 경계와 외연, 그리고 그 멤버십의 문제는 당분간은 여전히 주된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논의할 동아시아 공동체의 개방성 문제나 방법론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편, 동아시아 공동체를 EU와 마찬가지로 그 경계와 멤버십이 뚜렷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전일적인(monolithic), 단일의 정치·경제·문화의 체제로 보지 않고, 영역과 사안(事案)별로 그 경계와 범위가 보다 탄력 있게 운용되는 체제로 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경제적 공동체’의 경우에는 인도나 호주·뉴질랜드 등의 참여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안보적 공동체’의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참여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식량과 에너지안보,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에는 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미크로네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숙종(2010)은 안보, 통상, 통화, 환경, 인권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적·정치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EAS에 참여하는 등 동아시아에 다시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접근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은 그동안의 동아시아 다자협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면서, 동아시아의 보다 나은 역내 협력을 위해서는 특정의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 또는 관심이 있는 역내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는 다양한 조합의 ‘역내 하위(sub-regional) 협력체’가 가능하다고 본다(Clinton 2010a; 2010b).³⁾ 이러한 중층적(multi-layered)이고 탄력적인

Pacificism)’ 간의 논쟁인 셈이다. 이 용어는 2006년 5월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싱가포르의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제기했다(Cossa 2007, 147)

3)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도에 대한 최근 미국의 입장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클린턴의 연설문을 소개해 준 김기석 교수에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체는 소(小)다자주의(minilateralism)라 불리기도 하고,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구성된다고 해서 특임(特任)다자주의(ad hoc multilateralism)라 불리기도 한다(Cossa 2007; 김기석 2011에서 재인용).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과연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된 멤버십의 단위가 꼭 국민국가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단위는 국가인가, 아니면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경계 내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인가. 그리고 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의 수많은 행위자들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의 시민사회(Track 3)의 역할 및 중요성과 더불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영작 2006; 백영서 2000; 이숙중 2010; 이희옥 2004).

이처럼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을 EU식의 경직되고 경성적인 국민국가의 조직체로 보지 않고 그 구성단위를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를 지역공동체의 주된 구성단위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대한 귀속 정도를 적절하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011년 8월 22일자 타임(Time)지의 표지에는 ‘유럽의 쇠퇴와 몰락(The Decline and Fall of Europe)’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이 내걸렸다. 이에는 그 직전에 있었던 영국의 폭동, 노르웨이의 테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추락과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유럽의 추락과 무기력의 배경에는 그간 무리하게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체제를 하나의 틀로 묶어

게 감사를 표한다(김기석 2011).

- 4) 이는 특정의 사안만을 다루거나 아주 구체적인 어떤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되며, ‘참여의사가 있는 국가만 참가한다(coalition of the willing)’. 그 예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나 ‘북핵6자회담(Six-Party Talks)’ 등이 있다(Cossa 2007, 158-161).

왔던 EU의 조금은 조급한 통합과정과 매우 경직되고 경성적인 EU의 운영 시스템이 안고 있는 한계 등 유럽 지역공동체의 본질적 취약성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유럽의 위기는 지난 10여 년간 동아시아에서 또 다른 EU를 추구해 왔던 역내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타산지석이자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2. 어떤 동아시아인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목표와 원칙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 속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협력을 심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려 하는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공동체 구축의 목표와 지향점,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련된다. 이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며, 이 지역공동체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기존의 일부 동아시아 담론에 잠복해 있는 단기적 국익 중심의 사고방식을 거부한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축이 단순히 개별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가들은 대체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지역에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진보(progress)’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성취할 평화와 공존공영, 진보의 가능성은 특정 국가나 주민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등과 호혜’, ‘개방과 포용’, ‘관용과 다양성’, ‘자유와 인권’ 등의 ‘민주적 원칙’들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박사명 2006; 신윤환 2010; 이숙종 외 2009).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공동체가 역내 국가들 간에 지배와 억

압의 수직적 위계구도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지역에 강대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지역질서가 구축되는 일이다(박사명 2006; 신윤희 2010; 최원식 2004 등). 박사명(2006, 433)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약육강식의 패권주의적 지역질서’가 아닌 ‘상호의존의 다원주의적 지역질서’여야 한다면서, 중국과 일본 등의 강대국이 ‘중심’의 미래만 추구할 경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주의적 모색은 동북아의 패권주의적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다원주의적 지역공동체는 ‘중심’도 ‘주변’도 아닌 ‘가교’를 요구한다면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한국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신윤희(2010)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중국이나 일본이 패권을 장악하거나 세력을 양분하는 그런 구도가 아닌, 중견국가나 약소국가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구도여야 한다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연대하여 중국과 일본에 맞서는 형태의 세력구도가 가장 안정적이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아세안+3’에 기반한 다자주의가 역내 중견국가나 약소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가 공동체 내 구성요소들만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되어서도, 그리고 역외(域外) 국가들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김영작 2006; 최원식 2004).

3.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방법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법론에 관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입장을 들어보자.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우리가 집합적 노력을 통해 구축해 나가야 할 미래의 어떤 비전으로 본다. 그것은 기존의 동아시아 담론의 일부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향후 사회

적으로 구성되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현될 하나의 ‘정치적 구성물’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미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미래에도 영원히 불가능한 어떤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때문에 단기간에는 성취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장기지속(longue durée)’ 또는 ‘중기적 궤경(conjoncture)’의 시간틀에서 보면 분명히 가능한 어떤 목표이다. 그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실천 여하에 따라 언젠가는 창출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가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임하는 방법론으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또한 단기간에 EU가 성취한 수준의 지역통합으로 치닫는 데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박사명(2006, 433-436; 2008)은 ‘EU의 지역통합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ASEAN의 지역협력은 넘어서는 절충적 대안이 동아시아의 역동적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면서, 아세안 일부 국가가 제안하는 ‘ASEAN+, EU’ 구상을 그 한 예로 들었다.⁵⁾

아래에서는 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기본 관점이나 인식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세 가지 쟁점, 즉 ① 동아시아 공동체의 범위(무엇이 동아시아인가), ②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방향(어떤 동아시아인가), ③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방법론(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둘러싼 논의가 최근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어떤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5) 박사명은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은 ‘국가주권의 전면적 보장’을 전제로 하지만,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은 ‘국가주권의 다각적 양보’를 전제로 한다면서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손열 2006도 볼 것).

III.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국제환경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는 21세기 전반부의 세계 패권구도를 가름하는 세 세력, 즉 중국, 미국, 유럽과 각각 연관이 된다. 적어도 향후 이삼십 년은 이 세 지역이 삼족정립(三足鼎立)하면서 글로벌 권력지도를 그려 나가리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세 지역의 최근 정세변화를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1. 중국의 부상

우선 중국의 정치경제적 급부상과 지역패권국가로의 등장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10년에 GDP 5조 8,78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GDP 규모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누르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World Bank 통계자료). 개혁개방 당시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목표는 2020년에 GDP 5조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소강(小康)사회의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었다.⁶⁾ 원래 이 ‘소강론’은 덩샤오핑의 ‘삼보주론(三步走論)’에 기초하고 있다. ‘삼보주론’이란 덩샤오핑이 현대 중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제시한 ‘3단계 발전론’인데, 1보는 온포, 2보는 소강, 3보는 대동으로 이어진다. ‘온포(溫飽)’란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를 말하고, ‘소강’은 많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만들어 중산층 위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대동(大同)’은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단순화해서 요약하면, 온포는 개발도상국, 소

6) ‘소강(小康)’이란 말은 사서삼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나오는 말로 이상사회인 ‘대동(大同)’ 사회의 바로 전 단계를 일컫는 말이다. ‘대동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평등한 세상으로 유가(儒家)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말한다. 현대 중국의 입장에서 ‘대동 사회’는 바로 미국을 넘어서 선진 강대국의 꿈을 이룬 중국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강은 중진국, 대동은 선진국의 단계인 셈이다.

덩샤오핑은 자신의 '3단계 발전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스케줄도 제시했는데, '온포' 단계는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1979년부터 1999년까지의 20년으로 1인당 국민소득 800~900달러, GDP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소강' 단계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20년으로 개인소득 4,000달러, GDP 5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2020년이 아니라, 정확히 10년 앞선 2010년에 이미 이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이제 지역패권을 넘어 세계패권을 넘볼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다. 최근 퓨 프로젝트(Pew Global Attitudes Project)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22개국 국민들 중 15개 국가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서 세계 제일의 초강대국이 되었거나 또는 조만간 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Time* 11/08/01, 15). 아마 향후 20~30년간은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패권을 다투는, 이른바 G2 시대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후반은 확실히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유일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세기, 팍스 시니카(Pax Sinica)가 전개될 것이다.

2. 미국의 회귀

둘째는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 및 지역 FTA 등을 통한 중국 견제의 본격화이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지난 20년간 동아시아에 대해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오던 정책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다시 동아시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동아시아에 대한 재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고, 중국의 부상과 패권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하게 대응하고 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10년 1월에 행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에 연계되어 있고, 이 지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관심 지역임을 분명히 했다(Clinton 2010a).

최근 들어 일본의 참가의지 표명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재개입 전략이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는 한 예다. TPP에는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가 참여 중이고, 미국,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5개국이 그 참여 여부를 놓고 협상중이다. 미국은 2009년 12월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부(USTR) 대사가 미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TPP 참가 의사를 처음 공식화했다. 이 서한에서 그는 TPP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인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그 참가 범위도 호주, 베트남 등이 추가되고, 더 나아가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그리고 전체 아세안 회원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환태평양 경제통합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양희 2011).

미국에 있어 TPP는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재개입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만의 경제통합을 막는 효과를 가지는, 중국의 지역패권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인 셈이다. 그리고 TPP에 참가하는 미국의 최종 지향점은 환태평양 지역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엮는 소위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의 구축에 있다. 바필드와 레비(Claude Barfield and Philip Levy 2009)는 “미국이 아시아에 APEC과 여타 환태평양 기구들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국익을 해치는 지역패권국가로 냉혹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싱가포르 리관유 전 총리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TPP 참가 및 그 확장 프로젝트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면 재구성(wholesale reconfiguration)’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김양희 2011).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최근 일본은 매우 적극적인 화답을 보내고 있다. 작년 11월 14일 일본의 신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TPP 참가를 위한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2009년 이후 일본 국내의 몇 가지

중요한 상황 변화가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우선 이 결정은 멀리는 2009년 12월 일본 내각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발표한 ‘신(新)성장전략’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정부의 ‘신성장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고용과 인적자원 정책, 둘째는 환경(칸코)·건강(켄코)·관광(칸코)의 3K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셋째는 바로 FTA를 적극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도성장 벨트에 참여하려는 정책이다. 요약컨대, 일본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은 FTA 등 대외적인 연계를 통해 기존의 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TPP 참여는 바로 이러한 신성장전략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최희식 2011).

3. 유럽의 위기

셋째는 유럽의 위기이다. 최근 들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로존(Eurozone)의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인 재정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U 전체의 위기로, 세계경제 전반을 뒤흔들 글로벌 위기를 배태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현재 그리스의 총 국가부채는 약 3,500억 유로(우리 돈 약 532조원)에 달한다.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 전 총리는 지난 10월 31일 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제시한 구제금융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유럽 각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그리스는 바로 디폴트로 가고, 유럽은 즉각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만약 그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즉각 탈퇴시켰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파판드레우는 즉시 이 안을 철회했다. 그는 그 후 11월 10일 총리직에서 사임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를 지낸 바 있는 루카스 파파데모스(Lucas Papademos)가 새로 총리가 되어 임

시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리스의 정치권 및 지도층은 1974년 군사독재체제를 종식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부정과 부패, 정실주의(cronyism) 등 과거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와 행태를 버리지 못했으며, 국가역량이나 국가기능 면에서 부실과 허약성을 노정해왔다. 사회 각계에 정실주의가 제도적으로 만연하여 예컨대, 정당의 지도자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자리나 정치적 후원을 제공하는 대신 뇌물을 챙겼고, 이러한 상층부의 부패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문화를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시켰다. 세금 탈루도 성행하여 이것만으로도 그리스 정부는 매년 평균 220억 유로(약 3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상의 누수를 겪어야 했다. 또한 정부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회색시장(gray market)의 규모가 총 GDP의 1/4에 달할 만큼 큰 점도 정부의 재정위기를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 공공노조는 매우 강력해서 이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렸는데(대다수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50세에 은퇴하고 은퇴 후의 생활은 전부 공적 연금에 의존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국가재정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사회 모든 부문이 단기적 혜택을 위해 장기적 공공선(公共善)을 포기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엄청난 돈을 외부에서 빌려와야 했다(Calabresi 2011).

이제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모두 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탈리아에서도 재정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리와 그가 이끄는 자유국민당(PdL)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 마리오 몬티(Mario Monti)가 총리로 취임하여 새 정부에 의해 긴축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11월 20일 치러진 총선에서 호세 사파테로(Jose Zapatero)가 이끄는 집권 사회당이 패배하고 새로 국민당의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가 총리로 선임되어 재정적자 문제와 스페인의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들 모두 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와 일반 시민들이 강력히 저항하는 등 국내의 사정은 이들에



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정권들의 입지마저 위태롭기만 하다.

이런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독일 등 재정적으로 건전한 다른 나라들이 힘을 모아 구제금융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경제적(재정적)·정치적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망 또한 밝지만은 않다. 방만한 소비와 재정운용으로 어려워진 다른 나라의 재정적자를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저축과 세금으로 메우는 데 대해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다.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볼 때 게으르고, 방탕하고(profligate), 무책임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렵게 번 유로화가 쓰이는 데” 반대한다. 지난 9월에 실시한 독일의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유로본드 도입에 93%가 반대했다(Schuman 2011). 또한 유럽통합의 ‘내적 심화’의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켜, 재정통합과 더 나아가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도 쉽게 대답하기 힘들다. 유로존 내부의 완전한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부터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것이 유로존의 위기, 더 나아가 유럽 전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유럽통합의 내포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시나리오이며, 그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유럽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지, 아니면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질곡(桎梏)이 될지 지금으로써는 선뜻 대답을 내어놓기가 어렵다.

IV. 새로운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주는 교훈 및 함의

이제 이러한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 구축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이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어떠해야 할까. 이를 우리는 앞에서 제기

했던 세 가지 쟁점, 즉, 동아시아의 경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목표와 원칙,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방법론과 연관지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내부의 민주적 원칙

(1) 평등의 원칙과 역내패권의 거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순치(馴致)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패권뿐만 아니라 세계의 패권마저 넘보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참여해온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의 역내 패권 추구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로 귀환’ 한 미국에게 가장 긴급한 과제 중 하나도 바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흐름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연계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적절한 선에서 협력하면서, 동시에 그 정도를 지나치지 않게 함으로써 중국의 원망(怨望)을 사지 않는, 일종의 라그랑주 점(Lagrangian point)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

예컨대, 얼마 전에 한국의 TPP 참여 여부를 놓고 언론매체에서 갑론을박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도 이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미 한미 FTA가 조인된 상황에서 TPP에 참여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은 없으면서 중국의 원망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이 TPP를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⁷⁾ 이에 참여하는 것은

7) TPP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이것이 진정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음 대선을 겨냥한 국내용 정책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즉,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히 의존해 있는 상황이며, 중국 경제 또한 TPP 따위를 통해 견제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견제를

더욱 그러하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양자적 관계에서 지나치게 선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그러나 다자구도에서는 상황이 이와 좀 다를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명시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에게는 여전히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패권 추구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양자적 관계에서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다자적 틀'에서 보다 선명하고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숨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를 '평등과 공존공영'에 두고 특정국의 '역내 패권추구'에 대해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것이 중국을 겨냥하든, 아니면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을 겨냥하든지 간에 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역내 어떤 당사자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굳이 그리코(Grieco 1993)의 구속명제(binding thesis)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중국을 다자주의의 틀에 참여시켜 국제적인 규칙에 익숙하게 하고, 이를 존중하게 만듦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순치(馴致)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다양한 다자적 협력 프로젝트에 중국을 참여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다자간 협력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고도로 제도화하여 이를 통해 자신이 지나치게 구속받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적 차원의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는 긍정적인 편이다(이정남 2010).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십분 활용하여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해서 다자적 협력을 강화해 볼 일이다. 예컨대, 아래에 후술할 인간안보 문제

외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숨은 의도는 단지 미국 유권자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더더욱 TPP와 향후 FTAAP에 대한 우리의 의사결정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

와 관련하여 역내에 다자간 논의의 장을 빨리 만들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하여, 중국과 주변국이 함께 협력해 가는 ‘지역 협력’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이 자기중심적이고 덩치만 큰 (그리고 한번씩 터무니없는 생떼도 쓰는) 어린애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내부평등·공존공영의 원칙과 역내 개발격차의 완화

작금의 유로존의 위기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유로존을 구성하는 국가들 간에 경제적 격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유로존 17개국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핵심 부국(富國)과 함께 몰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와 같이 유럽에서는 비교적 주변부에 속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⁸⁾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있는 국가들이 단일의 통화권으로 묶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가간 경제력 차이에 기인한 역내 주변국(상대적 약소국)이 겪는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적자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당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들 수 있고, 통합 이후 남부 유럽의 주민들이 가지게 된 과도한 기대(북유럽 또는 선진유럽과 같은 수준의 소비 및 복지혜택을 기대하는)와 이로 인한 정부 재정 수요의 증대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남부 라틴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인데, 이들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여유로운’ 가치관(joie de vivre/joy of life를 추구하는)과 삶의 양식을 구가해 왔고, 이것이 이들의 방만한 소비생활과 복지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가져왔으며, 이는 이 지역 국

8) 현재 유로존을 구성하는 17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이다. 이 중에서 1인당 GDP로만 따진다면, 룩셈부르크(108,921달러), 오스트리아(44,863달러), 핀란드(44,522달러) 등도 부국에 속한다. 반면에 슬로바키아는 16,386달러, 에스토니아는 13,939달러이다(2010년 기준, 단위: USD, 세계은행 통계).

가들의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치문화와 맞물려 정부재정의 지나치게 방만한 운용과 심각한 재정적자, 그리고 대규모 국가부채라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유로존의 위기는 우리에게 지역 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구성원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대외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의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거론하고 나서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본다.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再考)

(1) 경제공동체 구축의 기본 방향

동아시아 공동체의 목표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보고서가 명시하듯이 “역내 모든 이들의 완전한 개발에 기초하여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목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역내 국가와 주민 모두의 공동 번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론이 이렇게 선명한 것과는 달리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되는 함의도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이 제시한 26가지 장단기 협력조치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 오늘날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그 우선순위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는 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맞춰져 있었다(박변순 2010; 박제훈 2004; 최영종 2003; 2004 등). 그리고 이러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자유무역지대(FTA)의 구축에서 시작된다. 지역경제통합의 과정에 대한 발라사(Balassa 1961)의 프레임워크대로라면 FTA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

(economic union)을 거쳐 ‘완전한 경제적 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으로 이어진다. EU의 경우 1991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9년 유럽 경제통화동맹(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출범 등을 거쳐, 2002년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도입함으로써 경제동맹의 단계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EU 이사회와 상임의장 제도 설치 등 단일의 정치공동체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의 유럽의 위기는 지역경제통합의 이러한 일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재고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어쩌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위기를 배태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을 미리 미리 제거해가면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일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에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역과 투자 분야보다 오히려 금융과 통화 부문의 협력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EASG 보고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장단기 조치들에 대해서도 그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의 추진이나 ‘동아시아 투자지역(EAIA, East Asia Investment Area)’ 설치 등의 조치보다, 금융 위기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또는 위기발생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금융협력 분야에서 ‘동아시아 차입협정(East Asian Arrangement to Borrow)’이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C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프레임워크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East Asian Monetary Fund)’으로 확장하는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역내 국가간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들, 즉 ‘인프라, IT개발 등에서의 협력’,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 협력’, ‘빈곤 감소 프로그램 실시’,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실시’ 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단일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있어서 EU, NAFTA,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지역주의’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논쟁 지점이다. 글로벌리즘(globalism)의 거대한 추세 속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는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방향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EU나 NAFTA, 남미 공동시장(MERCOSUR) 등의 지역주의는 글로벌리즘의 추세에 편승해서, 이를 보다 가속화시키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해당 지역의 특수이익을 도모하는) 지역주의의 형태를 띠었다. 각 지역의 역내 FTA 추구가 그 한 예다. 이런 식의 지역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추세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를 더욱 상승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고, 그 추세 속에서 지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다분히 ‘시장주의적·경쟁적 자본주의’의 한 측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이런 궤적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가 본격화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현대의 서구 금융자본주의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과 지역공동체 구축은 현존하는 서구주도의 금융 자본주의의 흐름에 편승하는, 그리고 그 장(場)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지역주의가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의 폐해와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지역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유로존의 위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담론을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경제공동체 담론’은 그동안 주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가져다 줄 효용과 또 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강조해 왔다. 반면에 ‘대안체제 담론’은 서구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

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존하는 금융자본주의와 작금에 진행되는 세계화가 배태하고 있는 위기의 요인들을 강조해왔다. 나는 이제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 1990년대 말 이래 지금까지 간단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경제위기와 최근 들어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反)월가 시위’ 등을 보면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 명(明)과 암(暗)을 모두 고려해 보는) 보다 균형 잡힌, 그리고 포괄적인 관점과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2)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동아시아 FTA의 대세는 양자간 FTA이다. 한미 FTA가 마침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비준되었으며, 이에 자극받은 일본은 한편으로는 한국·중국과의 양자 FTA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TPP 참여를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인 FTA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9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다자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구축 노력은 주춤해질 것 같다. 그것이 중국 등이 선호하는 아세안+3 중심의 EAFTA 구상이든, 아니면 일본 등이 주창해온 아세안+6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이든 말이다.

이에 대해 본 지면에서 모든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동아시아 역내의 FTA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이 구상하는 TPP에 대한 참여 여부와 미국이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지역 경제공동체 구상(FTAAP)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EAFTA나 CEPEA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여러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해서도 계속 민감하

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자유무역 지대 형성을 선도해 나갈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실익도 크지 않을 것 같다.

3.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방법론과 그 속도에 대한 재고(再考)

(1) 유럽통합과 유로존의 위기가 주는 함의

작금의 유럽의 위기는 유럽통합의 위기이기도 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재정위거나 유로존 전체가 안고 있는 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요인 중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역내 선진 핵심국가와 주변국가들 간의 경제적 격차, 즉 유로존 내부의 내적 불평등과 공존공영의 부재가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 뿐만 아니라, 시야를 좀 더 미시적으로 가져가 보면, 유럽연합의 지나치게 성급한 외연 확대와 통합의 심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급한 단일통화의 도입에 따른 회원국 일부에서 나타난 물가 폭등과 이에 따르는 서민들의 생활고 심화, 이를 완화하려는 정부 복지지출의 증대 등이 정부 재정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촉발했던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정치사회적 상황과 산업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 재정정책, 무역정책 등을 유연하게 펼 수 없다는 사실, 각국의 사정에 맞게 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없다는 상황이 최근의 위기에 대한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위기는 우리에게 지역통합의 방법론과 그 속도, 그리고 회원국의 범위와 멤버십, 지역공동체의 외연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유럽 공동체와 유럽의 통합과정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논의하고 이를 회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상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유럽의 위기는 그동안의 우리의 관점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는 이 지역의 지역공동체 구

축과 통합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었고, EU가 단시일 내에 너무 많은 국가를, 그리고 너무 다양한 국가를 포괄하려 했다는 데 있다. 초기에 EEC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으로 출발한 EU는 1973년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3개국, 1980년대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3개국, 그리고 1995년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개국을 추가하면서 15개국의 지역공동체로 점진적인 확장과 통합의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2004년에 동유럽과 남유럽의 10개국을 추가하고, 2007년에 다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추가함으로써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한 외연의 확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외연의 확대’ 뿐만 아니라 유럽은 그 통합의 ‘내포’에 있어서도 매우 심화된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EU는 단일의 화폐를 쓰고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을 통일하는 등 경제동맹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단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EU체제의 이러한 ‘경성적 통합(hard integration)’과 이 체제의 경직된 운용은 유로존의 위기가 보여주듯이 각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운영에서 유연성과 자율성을 빼앗아 버렸다. 이러한 통합은 또한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과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프로젝트이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단일의 전일(全一)적인 체제로 발전할 EU는 과연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는 참으로 엄중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EU식의 지역주의를 ‘경성적 지역주의(hard regionalism)’라 부른다면, 동아시아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주의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연성적 지역주의(soft regionalism)’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는 EU식의 경직되고 경성적인 국민국가의 결합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EU와 같이 그 경계와 멤버십이 뚜렷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긴밀하게 통합이 이루어진, 단일의 정치·경제·문화의 체제를 그 최종 지향점으로 상정하지도 않는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그 구성단위

와 경계, 멤버십 등을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구성단위로서 개별 국민국가의 공동체에 대한 귀속 정도도 적절하고 탄력성 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역과 사안(事案)별로 그 경계와 구성을 보다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라도 동아시아에서의 지역공동체 형성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점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일이지, 결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이다.

(2)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모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지양하고 지역주의를 보다 ‘연성화’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기본 흐름은 중국의 입장에도 일치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를 창출해 내자는 구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조직체’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중국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간에 경제발전이나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성적 통합’을 추진했을 때 그 결과를 별로 낙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고도로 제도화된 동아시아 협력기제 속에서 중국 자신도 스스로의 행위가 구속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초지역적인 제도화보다 기능적인 영역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에 이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이정남 2010, 215).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세안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아세안+, EU-’로 설정하는 이유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U든 동아시아 공동체든, 지역 공동체는 어떤 특징의 최종적 상태(state)라기보다, 유동적이면서 계속 변형·발전되어 가는 일종의 과정(process)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란 이상을 완성하는 작업,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화를 심화시키는 작업도 보다 장기적인

추세선에서 봐야 할 것이다. 보다 제도화된 지역공동체의 구축과 동아시아의 (높은 수준의) 통합은 가까운 장래에는 몰라도 먼 미래에도 영원히 불가능한 어떤 것은 아니다. ‘장기지속(longue durée)’의 시간 틀에서 보면 이런 수준의 동아시아 공동체 또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는 것이다.

4. 인간안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과 이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학습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작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하고 또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지역의 공동체 구축을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 중에서 특히 ‘비(非)전통적 안보’ 또는 ‘인간안보’ 분야에서 바로 협력 가능한 의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자간 협력의 ‘학습’을 해 보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역내 국가간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 국제결혼, 여행, 유학, 연수 등 여러 분야와 형태의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이와 더불어 더욱 심각해지는 각종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 지진, 지진해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광역 전염병(조류독감, 사스, 신종바이러스), 식량과 물 부족, 에너지 위기, 국제범죄와 테러, 해상보안 등 ‘인간안보’와 관련된 온갖 난제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가 그 주권 영역 내에서만 다룰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 등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 차원에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박사명 2006; 이숙중 외 2009).

중국 또한 (전통적 안보 분야보다는)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며(이정남 2010, 217), 일본 또한 그러하다(김수현 2010, 235).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들의 제안에 동조하고,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제를 앞장서서 주창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다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긴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의 실험 무대를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이러한 다자간 협력의 학습을 통해 순치됨으로써 보다 ‘왕도(王道)적 대국주의’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는 것이 역내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일일 것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여러 담론 중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으로 분류되는 일군의 학자들의 논의를 동아시아 공동체의 경계와 구성,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목표와 원칙,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방법론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세 쟁점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대체로 ‘개방적·탄력적 지역주의(open-flexible regionalism)’, ‘다원적·민주적 지역주의(plural-democratic regionalism)’, ‘장기적·점증적 지역주의(long-term incremental regionalism)’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는 데 반대하며, 이를 적어도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그 외연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것이며, 그 개방성의 정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경계와 지역공동체의 멤버십에 대해 사안별로, 또는 쟁점별로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유연한 지역주의’ 또는 ‘탄력적 지역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가들은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목표와 지향점을 보다 고차원적이고 궁극적인 가치에 두고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 각국이 지역주의와 공동체 구축에 임하는 동기를 각국의 국가 이익,

특히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의 극대화에 두는 데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들은 동아시아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별 국익에 봉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이 지역의 평화와 진보, 그리고 역내 모든 국가와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원칙 또한 보다 도덕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대체로 동아시아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라도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 구축이 유럽의 경험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단기간에 급속도로 정치경제체제의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지역협력의 규모와 강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제도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심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시간대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또한 최근 국제정세상의 세 가지 중요한 변화, 즉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재개입, 그리고 유럽의 경제적 위기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 구축에 미치는 영향 및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미국에 맞서 세계의 초강대국이자, 동아시아 지역의 패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중국 또한 명시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지배하는 패권적 지역질서의 출현을 여하히 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은 동아시아에서 다자적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중국을 이 다자적 제도화의 틀 내에 끌어들이어 지역협력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순응하

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공동체 구축의 도정에서 도덕적이고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방안은 중국이 지배하는 패권적 지역질서의 출현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동아시아에 다시 개입하고 있는 미국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되겠다. 중국이 다자적 제도화의 틀 내에서 순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겠으나 그게 단기적으로 확보되기 힘들다면, 당분간은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개입을 통한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인도·호주 등의 반중(反中) 연합전선에 의한) 세력균형의 구도가 구축되는 것이 적어도 중국의 일방적 패권구도 또는 중국의 패도적 대국주의의 발현보다는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띄고 무엇을 지향하게 될지, 그리고 심지어 이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라고 부를 만한 최소한의 메커니즘이 등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당 부분 중국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치기 어린 태도로 일관하거나, 자국의 소소한 국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중국 국민과 정부의 편협한 민족주의 정서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중국이 보다 개방성과 투명성, 다원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민주적 원칙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 그리고 문명국가의 일원으로 주변국들과도 조화롭게 협력하고 더불어 공존공영하려 할 때(和譜世界), 비로소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부를 만한 의미 있는 지역공동체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과 유로존의 위기는 EU와 같은 지역통합 모델이

동아시아에 그리 좋은 전범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이 겪는 위기의 요인 중 상당 부분은 유럽 통합의 지나치게 조급한 속도와 규모에 기인하는 것이다. 유럽의 위기는 FTA 등을 통한 경제적 통합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더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이 지역에 닥칠 사회경제적 위기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위기의 요인을 사전에 여하히 제거할 것인가 하는 점에 우리가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위기는 또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지나치게 성급한 외연의 확장과 멤버십의 확대가 그리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점도 일깨워주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로 상정해야 할 것이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석. 2011. “미국의 귀환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아키텍처: 동아시아 지역주의 협력의 G2 화.” 외교통상부 주최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발표논문.
- 김수현. 2010.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이론과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구축』. pp. 231-259.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김양희. 2011.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과 일본의 TPP전략.” 코리아연구원 특별보고서 (KNSI 특별기획 36-2호). <http://knsi.org/~knsiorg/knsi/kor/center/view.php?no=13552&c=1&m=11>(검색일: 2011. 12. 3).
- 김영작. 2006.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상.” 김영작 · 김기석 편.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pp. 13-36. 파주: 한울.
- 나종석 · 권용혁 · 이진원. 2009.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pp. 181-37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편. 2008.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 박번순. 2010. 『하나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통합과 공존의 모색』.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서울: 이매진.
- _____. 2008.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pp. 11-44.
- 박상수. 2010.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아세아연구』 53(1): 73-100.
- 박승우. 2008a.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 『동아연구』 54: 9-49.
- _____. 2008b.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pp. 309-346.
- _____.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1): 61-110.
- 박제훈. 2004. “동북아경제공동체, 쟁점과 제안.”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2004). pp. 81-119.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 손열. 2006. “지역, 지역주의, 동아시아.” 손열 외 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pp. 11-33. 서울: 지식마당.
- 신윤환. 2008.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pp. 373-

- 398.
- _____. 2009.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연구』 56: 107-37.
- _____. 2010.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공동체’의 미래.” 『동아시아브리프』 5(1): 6-15.
- 이숙종. 2010. “세계 속의 동아시아.” 『동아시아브리프』 5(2): 6-14.
- 이숙종 · 김기석 · 박영준 · 서상민 · 전재성 · 조양현 · 한석희. 2009. “한 · 중 · 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pp. 15-177.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정남. 2010.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이론과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구축』. pp. 208-230.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종석. 2011.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남: 세종연구소.
- 이희옥. 2004.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2004). pp. 341-365.
- 최영종. 2003.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서울: 아연출판부.
- _____. 2004.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이론, 현황 및 전망.”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2004). pp. 237-270.
- 최원식. 2004. “천하삼분지계로서의 동아시아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2004). pp. 9-24.
- 최희식. 2011. “TPP를 둘러싼 일본 국내 정치적 배경 분석 및 평가.” 코리아연구원 특별보고서(KNSI 특별기획 36-1호). <http://knsi.org/~knsiorg/knsi/kor/center/view.php?no=13552&c=1&m=11>(검색일: 2011. 12. 3)
-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2004.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 한승조. 2011. 『아시아태평양공동체와 한국』. 파주: 나남출판.
- 한용섭 · 박종철 · 윤현근 · 황병무 · 박영준 · 이승희 · 김영호 · 이서향 · 오승렬. 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파주: 나남출판.
- 황인원. 2007. “‘확대지향’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아세안의 대응.” 『동아시아브리프』 2(2): 116-123.
- Balassa, Bela. 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Allen & Unwin.

- Calabresi, Massimo. 2011. "Greece on the Precipice." *Time* Nov. 21, pp. 32-37.
- Clinton, Hillary Rodham. 2010a.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Address delivered at the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Jan. 1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01/135090.htm>(검색일: 2011. 12. 13).
- _____. 2010b.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Remarks made at Kahala Hotel, Honolulu, Hawaii, Oct. 28.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10/150141.htm> (검색일: 2011. 12. 13).
- Cossa, Ralph A. 2007. "An East Asi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An American Perspective." Ralph A. Cossa and Akihiko Tanaka, eds. *An East Asi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pp. 144-174.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Grieco, Joseph M. 1993.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avis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pp. 301-33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uman, Michael. 2011. "Why Germany Can't Save Europe: Much Less the World." *Time* Oct. 3, pp. 24-27.

ABSTRACT**Discussions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Reflecting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PARK Seung Woo**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Yeungnam University

The discussions on East Asia, such as on the issues of East Asian regionalism, regional coope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can be divided into five groups: the ‘economic community discourse,’ ‘political and security discourse,’ ‘East Asian identity discourse,’ ‘alternative social order discourse,’ and ‘East Asian Community discourse.’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ing arguments of ‘East Asian Community discourse’ on the boundary and composition of East Asian community, on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in East Asian regionalism, and on the approaches and methods of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The recent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 includ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rise of China, the US re-engagement in East Asia, and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have a profound impact on our discussion on East Asian regionalism.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lessons that we learn from these changes and their implications in our efforts to promot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to build a viable regional community.

Key Words East Asia, discourse of East Asia, East Asian regionalism, East Asian community,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